

올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금액 69% 급증

1~5월간 6,313억원... 업계 “하반기 물량 부족 경기침체 우려”

향후 건설업계 공공공사 수주액이 줄어들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발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입찰제도 변화의 영향도 크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올해 1~5월 수주금액은 6,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발

주가 상반기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도내 건설공사 물량은 크게 부족하다. 올해도 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물량

은 지난해보다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2조5,627억원에 달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

억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발주가 늦어진 데다 기술형 입찰 등도 잇따라 유찰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시기도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공공사 물량 자체가 적은 데다 여전히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건설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도교육청 국·과장급 11명 인사

도교육청의 7월1일자 지방공무원 승진·보직이동 인사가 20일 단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국장과 감사관을 모두 여성으로 발탁하는 등 일반직공무원 504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김경애 행정국장

김경애(57) 행정국장은 “교육신진국 실현을 위해 행정 지원과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 춘천출신. 춘천여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석사)을 졸업.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행정국 행정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 2009년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



박준매 감사관

박준매(58) 감사관은 “청렴한 교육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 홍천출신. 홍천여고를 졸업. 197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국 행정과·재산담당, 행정국 총무과·총무담당, 행정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남편 김종윤씨와 2녀.



심만섭 정책기획관

심만섭(57) 정책기획관은 “강원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양양출신. 양양고를 졸업. 감사담당과 법무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감사관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자연씨와 1남1녀.



엄준열 춘천교육문화관장

엄준열(59) 춘천교육문화관장은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 영월출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 영월교육청 지원과, 행정국 시설과·시설관리담당, 행정국 시설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신현숙씨와 2남.



박봉희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58) 강릉교육문화관장은 “행복한 배움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피력. 인제출신. 기리고, 한림전문대 인터넷정보학과를 졸업. 행정국 예산과·교육공무직담당,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금순씨와 1남2녀.



안강수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58) 속초교육문화관장은 “설악권을 아우르는 행복한 교육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각오. 속초 출신. 영동포고를 졸업. 1981년 공직에 입문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행정국 예산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정금희씨와 1남1녀.



심동자 감사관실 감시총괄담당

심동자(56) 감사관실 감시총괄담당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피력. 인제 출신. 춘천여고, 한국방송대 교육학과, 한림대 사회복지학과(석사)를 졸업. 행정국 조직운영과 조직관리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남편 김만수씨와 2남.



김월용 행정국 예산과장

김월용(57) 행정국 예산과장은 “적절한 예산 계획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겠다”고 약속. 원주시 출신. 원주고를 졸업. 기획공보담당관 공보담당, 홍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춘천기계공고·교육행정실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함부자씨와 1남1녀.



안종후 행정국 행정과장

안종후(57) 행정국 행정과장은 “도내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 춘천출신. 강원사대부고를 졸업.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강원학생교육원 총무과장,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필녀씨와 1남1녀.



송선호 행정국 시설과장

송선호(57) 행정국 시설과장은 “학교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동해 출신. 목호고, 관동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국 행정과·행정담당, 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엄은주씨와 1남1녀.



윤종영 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윤종영(58) 강원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은 “전국 최우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정선 출신. 정선중고,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한국교원대 교육학(석사)을 졸업.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전영숙씨와 1남.

‘공공공사’ 지체 벌금 10배이상 차이

건설사 공사 지체땐 ‘배상폭탄’ 발주처 대금 지연땐 ‘찔끔보상’

건설사 年 36.5% 물리면서
발주처엔 年 3.46%만 적용
지금 금액 기준도 ‘제각각’

공공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지연할 때 내는 지체상금 금리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주는 지연보상금 금리가 10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체상금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 지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는 반면, 지연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하다. 모두 같은 벌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건설사가 잘못하면 ‘배상 폭탄’, 발주자가 잘못하면 ‘쥐꼬리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금

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 일수 1일에 대응해 공사금액 1000 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대출금리로 따지면 36.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B공공기관이 발주한 10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를 1일 지체하면 1억원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356일을 지체하면 365억원을 내야 한다.

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연한 경우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을 365일 동안 못 줬을 경우 34억6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공공공사’ 지체 벌금 최대 10배 차

금액 기준도 다르다. 지체상금은 수행한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이다.

이 같은 지연상금률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 공공공사 표준첨부계약약관 제45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경우 공사 완료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일수에 따라 당시 일반 대출금리를 적

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엔 연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70년 8.25% 수준이었지만, 이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며 2008년엔 3.7%, 2013년 이후엔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연 이자액 산출 방법은 지체배상금 산출 방법과 동일한 일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

체상금률은 해당 국가의 대출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이후 20년 동안 이 기준(연 36.5%)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평균 대출금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0분의 2 수준(연리 7% 전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